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본 한국 사회의 위기에 대한 성찰*

박찬구**

<요약>

2014년 4월의 세월호 참사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배는 250명의 고등학생을 포함한 승객 304명을 태운 채 침몰했는데, 그 희생자의 규모도 규모지만 승객 구조의 임무를 저버린 선원들과 해경의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했다. 이 참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지닌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몇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하는데, 우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고등학생들이 바라본 위기, 세월호 선원들과 해경의 행태를 통해서 본 위기, 부진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본 위기로 나누어 살펴본 후, 이어서 이번 참사의 배경이 된 문제점들을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 제일주의, 신자유주의의 확산, ‘위험사회론’의 적용을 통해서 본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경제성장 제일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과를 낳았고, 신자유주의는 비정규직을 양산함으로써 근무자들의 책임감을 약화시켰으며, 정부의 부패는 사회 각 기관의 상호견제기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사고의 위험성을 높였다. 이제 한국사회는 ‘비리-사고사회’라 불려도 좋을 정도가 된 것이다.

만약 한국사회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이제까지의 고도성장과정에서 형성된 구조와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경우는 하나의 시금석을 제공해준다. 왜냐하면 독일은 ‘이익’과 ‘안전’의 균형을 달성한 모델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이러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한국이라는 배는 세월호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핵심어】 한국 사회의 위기, 세월호 참사, 경제성장 제일주의, 신자유주의, “비리-사고 사회”

* 이 글은 “한국 사회의 위기에 대한 윤리적 성찰 -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2015년 한국윤리학회 하계학술대회>(2015. 6. 5)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goopark@snu.ac.kr

1. 머리말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 중 가장 빨리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나라인 동시에, 인구가 5000만 명 이상(2012년 이후)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인 세계 8개국 중 하나이다. 또 2차 대전 이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3세계에서는 ‘한강의 기적’을 배우고 싶어 한다. 이렇게 제3세계가 부러워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임에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은 행복하지 못하다. 양극화가 심하고 공정과 상생과는 거리가 먼 각박한 사회라고 느낀다. 특히 ‘국민행복시대’를 내세운 현 정부 아래에서 경기침체와 각종 재해, 그 중에서도 국가의 부실과 적폐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한국 국민은 ‘국민불안시대’와 ‘국민불만시대’를 살고 있다.¹⁾

그 간의 다른 재해에 비해 세월호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선 304명이라는 희생자의 숫자도 숫자지만 그 중 250명이 수학여행 가던 고교생이라는 점, 그래서 자식이나 손자가 있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의 일처럼 볼 수 없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발달된 IT 기술(SNS) 덕에 300여 생명이 눈앞에서 고스란히 수장(水葬) 당하는 것을 마치 생중계 보듯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선원들이 선실의 승객들에게 ‘빨리 밖으로 대피하라’는 안내방송만 제대로 했어도, 또 사고현장에 도착한 해경이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치기만 했어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을 무참하게 죽도록 내버려두었기 때문이다.²⁾

1) 안국신, “더불어 잘 사는 ‘바로 바로’ 사회”, 『철학과 현실』 102호(철학문화연구소, 2014 가을), pp. 96-97.

2) 세월호 대참사의 비극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배가 침몰하기 시작한 8시 48분부터 완전히 침몰한 11시 20분까지 152분이 걸렸으나 배 안의 승객이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로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선장을 비롯한 15명의 선원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은 탈출하면서 승객들에게는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고 거듭해서 방송했다.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모두 구조되었지만, 지시를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두 번째 책임의 주체는 사고 해역에 도착한 해경들이다. 해경 123정의 정장은 당연히 해야 하는 선실 진입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승객들에게 퇴선 방송도 하지 않았다. 해경이 도착한 9시 30분부터 배 안에 있던 단원고 학생이 마지막 카톡을 보낸 10시 17분까지는 무려 47분이라는 시간 여유가 있었고, 이는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으나, 결국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9월 24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들 공판에서 탈출 시뮬레이션 전문가인 박형주 가천대 교수는 ‘빠른 경우 5분만에 세월호의 476명이 모두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홍성태, “세월호 대참사와 비리-사고 사회 한국”, 『4. 16(세월호 사건)에 대한 인문적 성찰과 재난인문학』(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문명연구사업단 심포지엄 자료집, 2014. 10. 31), pp. 199-200)

그 이후의 수습과정에서도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가 사고의 원인 및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속 시원히 해명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4년 10월 6일, 수사를 종결하면서 ‘무리한 증축과 과적, 운항 미숙’이 사고의 원인이라 결론지었지만, 선주인 ‘청해진 해운’이 ‘어떻게, 왜’ 이러한 무리수를 둘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사고 수습과 미봉책이 이제껏 되풀이되어 왔으며, 그래서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³⁾

1999년 ‘화성 씨랜드 화재’ 사고로 큰아들을 잃은 후 “이 나라에 더 이상 기대가 없다. 둘째라도 온전히 키우고 싶다”라며 혼장을 국가에 반납하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버린 전 국가대표 필드하키 선수 김순덕씨가 세월호 사건 뉴스를 듣고 기자에게 토로한 “우왕좌왕,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것도 여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를 더욱 절망케 한다.⁴⁾

이제 우리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발생했는지, 또 사건 발생 직후에 대처하는 방식이 왜 그렇게 답답하고 혼란스러웠는지, 나아가 왜 그런 참사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들이 계속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이런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여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본 우리 사회의 위기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이 사건 자체와 전후 맥락을 통해서 많은 국민이 위기의 심각성을 감지했는데도 이제까지의 여느 사고들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잊히고,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던 문제점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 또 흐지부지된다면, 그 다음에는 결정적인 위기가 닥쳐서 한국 사회가 다시는 회생하지 못할 정도로 끝장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처한 위기 국면의 실체를 직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3) 사실 이런 식의 대형 참사는 그 간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고, 이는 세월호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예를 들면, 1970년 4월 8일 ‘와우아파트 붕괴’(33명 사망), 1970년 12월 15일 ‘남영호 침몰’(319명 사망), 1971년 12월 25일 ‘대연각호텔 화재’(163명 사망), 1974년 11월 3일 ‘대왕코너 화재’(88명 사망), 1993년 10월 10일 ‘서해훼리호 침몰’(292명 사망),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32명 사망), 1995년 4월 28일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101명 사망),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502명 사망), 1999년 6월 30일 ‘화성 씨랜드 화재’(23명 사망),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192명 사망, 21명 실종), 2014년만 해도 2월 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10명 사망), 세월호 사건 이후인 5월 26일 ‘고양 터미널 화재’(7명 사망), 10월 17일 ‘판교 환풍구 붕괴’(16명 사망) 등이 그것이다.

4) 씨랜드 사건 때에도 화재 원인과 피해 어린이 신원 등에 대한 대책본부의 발표가 여러 차례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중앙일보>, 2014. 4. 20)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2.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5단계에 걸쳐 타격이 가해진 절망을 안겨주었다고 강준만은 말한다. 첫 번째는 세월호의 선주, 선장, 선원들 및 감독기관의 관계자들이 사람의 생명을 돈보다 가볍게 여겼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두 번째는 사고 이후 해양경찰을 비롯한 관계 당국의 자세와 대응을 보면서 절망했고, 세 번째는 공적 영역을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책임자들의 태도에 절망했고, 네 번째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유가족과 국민의 공분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다섯 번째는 세월호 참사 49일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절망에서 벗어날 정치를 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고 하면서 “이것이 국가란 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⁵⁾ 사실 이러한 절망감은 그간 우리 국민 대부분이 느껴왔던 것이고, 이를 속 시원히 씻어줄 대안이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답답함이 더하다.

아래에서는 우선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들과 같은 세대인 고등학생들의 관점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 국면을 조망해 본 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원들과 해경의 행태를 통해서 본 문제점, 부진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본 문제점을 차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1 고등학생들이 바라본 한국 사회의 위기

아래에 소개하는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고등학생들의 견해는 한 교사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수업시간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⁶⁾

학생들이 가장 먼저 토로한 점은 우리 정부와 언론과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었다. ‘세월호 사건이 주는 교훈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이 답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가 너무 많이 씩어 있음을 느꼈다. 어느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이 없고,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려 하지 않는다.

5) 강준만, “짜가지 없는 진보”, 『인물과 사상』(2014), pp. 129-131 참조.

6) 도홍찬, “고등학생들이 바라본 세월호 사건, 그리고 윤리교육의 반성”, 『세월호 사건에 대한 총체적 성찰』(2015년 한국윤리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5. 6. 5), pp. 155-180 참조.

우리들이 세월호 사건을 보고 느낀 게 있다면,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오히려 그 사건들을 이용하는 정부측 사람들을 보면서 누굴 믿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생길 정도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정부를 믿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시민들이 뭉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정부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위엄을 가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정한 편향적인 언론들로 사람들의 시선들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갈등을 겪는 것이 신기했다.⁷⁾

다음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이다.

지상파나 종편의 편향이 심하다고 본다. 시청률로 장사하기에 자극적이고 시청자를 건드리는 소재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최초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된 후 언론사들은 앞 다투어 사망한 학생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정모 군의 책상, 사물함 등을 뒤져서 그의 교과서 등을 찍었습니다. 고인의 유품을 대하는 예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구조되어 안정을 취하던 학생들에게 친구들의 비보 소식과 질문들을 서슴없이 던져 학생들을 놀라게 하고 끝내 울음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전국적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 언론사들은 보도준칙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추측성 기사를 내고 몇 분 뒤 정정보도로 바뀌면 그만이고 속보경쟁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빙자했습니다.⁸⁾

위와 같은 학생들의 비판적인 언급에 대해 혹자는 ‘그것은 특정 견해에 영향을 받은 일부 학생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요즘 학생들의 실상을 잘 모르는 데에서 생기는 오해이다. 요즘 학생들은 사회적 정보를 기성 언론 매체보다는 SNS와 같은 일상적인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일상 미디어는 기성 언론이 의제 설정한 것과는 다른 구도로 급속히 정보가 확산된다. 이처럼 뉴미디어가 확산되고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기성세대보다 이러한 매체에 익숙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건의 실체를 더욱 다양하게 바라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세월호 사건의 보도에 대해서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이 일상 미디어

7) 도홍찬, 위의 글, p. 159에서 재인용.

8) 같은 글, p. 161에서 재인용.

어가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⁹⁾

더 나아가 학생들은 세월호 사건을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시대적 특성 및 구조적 문제로 연결시켜 바라보기도 했다.

저는 세월호 참사의 잘못이 특정한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구조의 모순이 빚어낸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 세월호 선장은 1년짜리 계약직이었으며, 선원 17명 중 12명도 비정규직이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어느새 비정규직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산재 사망률 1위를 다투는 것도 세월호 침몰과 본질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작업이나 중요한 일을 비정규직, 일용직에게 떠넘겨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한 한국은 계속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월호 참사는 이런 위험사회의 성격을 바깥으로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¹⁰⁾

끝으로 우리 사회의 어른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토로한 다음과 같은 말은 우리로 하여금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도록 만든다.

세월호 선장이나 무능력한 대통령과 정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다.¹¹⁾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고등학생들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총체적인 위기 국면에 놓인 대한민국의 실상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2.2 세월호 선원들과 해경의 행태를 통해서 본 위기

우리는 버스를 탈 때 이 버스가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이고 설사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더라도 운전기사가 승객들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 조치는 취할 것이라고 암암리에 기대한다. 또 교통사고가 나서 구급차와 경찰을 부를 때 119요원이 부상자를 구호하고 경찰이 사고 조사와 더불어 사후 안전 조치를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위험의 정도가 더 큰 해상 교통과 해난 사고의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만일 이러한 기대와 신뢰가 깨진 상태라면 그 사회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즉 기본이 안 갖추어진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기대와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우선, 배의 침몰 과정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의 탈출을 돕지 않고 자신들만

9) 같은 글, p. 162.

10) 같은 글, p. 165에서 재인용.

11) 같은 글, p. 166에서 재인용.

탈출한 일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 만일 이런 예상을 못했다면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퇴선방송을 하지 않는 등 선원의 기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신들의 행동을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이다. 이것은 발달된 SNS 덕에, 즉 학생들의 카카오톡 교신내용이 알려짐으로써 폭로되고 말았다.¹²⁾ 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의문은, 왜 퇴선방송을 안 하는데 그치지 않고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거듭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원래 배가 기울기 시작할 때 밑바닥의 3등실 승객들이 밖으로 이동하면 무게 중심이 무너져 배가 급속히 기울게 된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러한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배의 복원력이 살아 있을 경우이다. 배가 이미 침몰하기 시작한 경우라면 질서 있게 속히 탈출하라는 안내를 했어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송을 거듭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때까지 배를 떠 있게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무책임함을 넘어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행위이다.

둘째는 그야말로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이다. 배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일부 선원은 갑판 위에서 전화로 침몰시의 화물 손실과 관련하여 회사에 보고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선원으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기는커녕 ‘사람의 생명을 돈보다 가볍게 여기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세월호의 전체 승무원 29명 가운데 15명이 계약직이고, 선박직 15명 가운데 10명이 근무 경력 6개월 미만의 비숙련 노동자이며, 선장조차 월급 270만 원의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들의 근무 여건과 직무 구조를 감안할 때 이들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승무원들 중 끝까지 승객들을 대피시키다가 희생된 3명의 의사자들, 즉 승무원 박지영, 정현선씨와 아르바이트 직원 김기웅씨의 사례를 볼 때, “경력은 많아도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받지

12) “그날(2014년 4월 27일), JTBC <뉴스9>은 수현이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동영상 중 하나를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침몰 당시 세월호 내부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지러운 화면 속에서도 아이들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두려움이 들이닥쳤을 상황이지만, 아이들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엄마 아빠를 찾으면서도 선생님을 걱정할 줄 알았고, 옆 친구에게는 선뜻 구명조끼를 양보했다. 배가 점차 기울어가긴 했지만, 움직이지 못할 정도까지는 아닌 듯 싶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배에서 탈출할 만한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연이어 울려 퍼진 안내방송이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믿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따랐다. 승객들을 내팽개친 채 도망간 선장의 지시는 동영상에 끝날 때까지도 계속됐다. 아이들은 15분 동안 여전히 제자리에 묶여 있었다.”(“진상규명은 우리 아들이 내준 숙제인데 안 할 수 없잖아요-2학년 4반 박수현 학생의 아버지 박종대씨 이야기”,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금요일엔 돌아오렴-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창비, 2015), p. 193)

못해 무지했고, 사고가 발생하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¹³⁾라는 일부 승무원의 변명은 온전한 변명이 될 수 없어 보인다.

결국 선원들에 대한 부실한 안전 교육 및 정신(윤리) 교육, 그리고 열악한 근무 여건이 참사의 중요한 원인이 된 셈인데, 이는 조난한 배에서 먼저 탈출한 일로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 결국 죽음으로써 이를 속죄한 선원의 이야기를 그린 조셉 콘래드(Joseph Conrad)의 소설 “로드 짐(Lord Jim)”¹⁴⁾에서 엿볼 수 있는 뱃사람의 기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부실한 선원 교육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해경의 행동을 들 수 있다. 사고 당시 해경은 왜 그렇게 늦게 출동하고 왜 승객들을 구하지 못했을까? 첫째, 해경의 진도 해상관제센터에서 배의 침몰 상황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출동한 경비정은 승객 구조에 필요한 장비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도 관제센터 직원들의 업무 태만은 나중에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관제 업무라는 전문 분야에 전문가를 배치하지 않고 일반직을 순환보직으로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직무의 동기 수준이 낮았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또 승객 구조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해경의 업무에서 안전이나 구조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간 해경은 해상 운송과 관련한 범죄를 수사하는 데 더 주력해왔고, 특히 예산의 상당 부분을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데 사용해왔기 때문에 선박 구조를 위한 인력과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¹⁵⁾ 하지만 출동한 경비정의 목전에서 일반 어선들이 세월호에서 탈출한 승객들을 필사적으로 구조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지켜보기만 한 해경의 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 보인다. 이는 결국 해상 안전에 대비한 해경 업무의 운용이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점, 그리고 해경 요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부실했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둘째, 세월호 구조 및 수색 업무가 해군 및 민간업체에 의해 진행된 사실을 볼 때, 해상 구조라는 국가적 과제가 해경의 관장이 아니라 사실상 민영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해난 사고가 나면, 해경이 중심이 되어 구명 및 구난활동을 하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안전행정부나 해양수산부가 중간 역할을 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지원들(구명보트, 헬기, 구조요원 배치 등)을 신속히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해야 할

13) 3등 항해사 박모씨의 진술(<오마이뉴스>, 2014. 12. 21).

14) 조셉 콘래드, 『로드 짐』(민음사 세계문학전집 116, 2006) 참조.

15) <연합뉴스>, 2014. 4. 30; 장덕진 외, 『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재난과 공공성의 사회학』(한울 아카데미, 2015), pp. 31-32 참조.

해경이 청해진해운에 언딘과 독점 계약을 하라고 중개하고 언딘의 출동을 기다리는 사이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말았다. 당시 해경은 언딘이 사고 지점에 올 때까지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에 나선 민간 잠수사나 해군 UDT요원들의 투입조차 막았다. 위험에 처한 생명을 두고 이윤과 이권을 우선하는 이른바 ‘해피아’의 치명적 병폐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¹⁶⁾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다. 따라서 해난 사고가 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처할 때 국민이 해경에 구조를 요청하면 해경은 즉시 출동하여 국가의 임무인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다. 만일 사고가 나도 국민이 이러한 기대를 할 수 없거나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이러한 국가는 존재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존재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본 한국 사회의 위기의 실체이다.

2.3 부진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본 위기

세월호 사건의 진상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2014. 11. 7)에만 205일이 걸렸다. 이렇게 특별법 제정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족들의 요구를 여당이 사법체계를 뒤흔든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 과정에서 야당은 정치적 공세를 취했고, 여당은 이를 방어하는 가운데 세월호 문제는 정치적 논란으로 변하고 말았다. 세월호 사건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유족들 및 야당의 주장과 여당의 주장이 이분법적으로 이념적 색채를 띠기 시작하면서, 정작 중요한 진상 규명은 뒤로 밀리는 본말전도(本末顛倒) 양상이 나타났다.

서구에서는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곧바로 정부나 의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 조사 및 관련자 증언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조사보고서를 발간한다. 이후 제도개편 같은 후속 조치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제시되었지만, 체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법당국의 관련자 처벌은 범죄행위 유무만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는 거리가 있다.¹⁷⁾

국가나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사건 초기부터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분석해 2014년

16) 강수돌, “세월호 사태와 기업·정부의 사회적 책임”, 『4. 16(세월호 사건)에 대한 인문적 성찰과 재난인문학』, p. 108.

17) 장덕진 외, 『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재난과 공공성의 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2015), p. 25.

5월 29일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라는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¹⁸⁾ 여기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노후 여객선의 선령을 연장시켜 준 점, 해운조합이 선박의 불법 과적 운항, 안전 점검, 출항 점검을 부실하게 한 점, 한국선급이 선박의 무리한 증축 허가를 내준 점, 해경이 불법 운항계획서를 승인한 점, 잦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해난 사고 시의 관리 책임에 혼선을 빚은 점, 해양 사고에 대한 대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점, 정확한 침몰 경위, 세월호 선원들의 잘못된 대응, 해경의 잘못된 초기 대응, 정부 재난관리 시스템의 부실과 무책임, 해경의 구조활동 방해 의혹, 민간업체 언딘과 해양수산부 해경의 부적절한 관계, 사고 이후 언론 통제와 은폐 의혹, 피해 가족에 대한 감시와 탄압, 청와대의 대응과 지시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정부의 해양 행정 업무와 관련된 책임이나 비리를 밝히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¹⁹⁾

투명한 진상 규명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변수로 이른바 ‘관피아’의 존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한국의 공익성을 띤 조직이나 큰 기업체 가운데에는 전관(前官)이나 학벌로 구성된 배타적이고 특권적인 공동체가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일의 전문성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이들이 로비에 앞장서고 부정을 서로 눈감아주면서 이득을 챙기는 공고한 먹이사슬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해양수산부 출신의 전직 공무원들이 포진한 관변단체들(이른바 ‘해피아’)이 해운 관련 인허가 업무를 도맡아 각종 불법을 묵인해줌으로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또 해난구조 업무를 ‘언딘’이라는 민간업체에 맡김으로써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이러한 병폐의 일단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 작업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언줄과 이해관계로 얽힌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진상 규명에 협조적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간 사건의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검찰의 수사결과가 왜 ‘꼬리 자르기’로 보이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구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활동을 벌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공공과 민간 차원의 다양한 백서 발간 활동 등을 지속하면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의에 기반을 둔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실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제도 및 시스템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의 후속 조치는 이와는 대조적이었다. 들끓는 여

18) <경향신문>, 2014. 5. 8.

19) 장덕진 외, 위의 책, p. 35.

론을 일시적으로 비켜가기 위해 유병언 같은 희생양을 찾거나, 피해자 가족들을 달래기 위해 보상 위주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해경 같은 문제 있는 기존 조직을 폐지하고 새 조직을 만들거나, 기존의 실패한 체계를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재난의 경우에 그래왔던 것처럼 피상적인 종합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는 재난이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없다.²⁰⁾

3. 세월호 사건을 초래한 배경에 대한 성찰

본 장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본 우리 사회의 위기의 실상을 검토한 데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을 초래한 배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 제일주의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위험사회론에 입각한 성찰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3.1 경제성장 제일주의

사회과학자들은 이번 세월호 참사가 현재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를 드러낸 ‘징후적 사건’이라고 말한다. 지난 50여 년 간의 압축성장을 거치면서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표방해온 구조,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20년 가까이 진행된 변화, 즉 효율성과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이런 사고는 예상된 것이었다는 것이다.²¹⁾

한국은 지난 50년간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에서 벗어나 선진국(developed country)에 진입하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왔다. 국가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성장률과 GNP를 끌어올리는 데 두었으며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가난했던 지난 시절에 비해 반드시 더 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가난했던 시절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온갖 사회 문제가 생겨나고, 불안과 스트레스, 절망과 우울증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간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왔던 우리 삶의 자세에 어떤 문제가

20) 같은 책, p. 164.

21) “공공성이 무너진 나라: 무엇이 ‘세월호 참사’를 낳았나”, <한겨레신문>, 2014. 5. 14. 참조.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문에 세월호 사건은 결정타를 가했다. 세월호 선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물질주의·황금만능주의에 중독된 행태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이 우리의 안전과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니 오히려 그것을 위협한다면 이제 우리는 목표를 달리 설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의 경제성장 제일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는 이른바 ‘민주정부’라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한-미 FTA, 새만금 갯벌매립 같은 토건사업, 원자력 발전소 확대, 영리 병원, 공기업 민영화 같은 정책들이 펼쳐졌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민주정부가 공공성과 서민 복지를 우선하는 정책 대신 위와 같은 정책들을 폈던 이유는 바로 경제성장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GDP 증가율을 의미하는 경제성장률을 국가정책의 우선 목표로 삼는 순간 국민의 안전이나 삶의 질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일이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성격이 달라 보이는 위와 같은 정책들의 공통된 토대는 바로 ‘그렇게 해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성장제일주의 하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나 지속 가능한 미래 같은 것은 1차적인 국가정책 목표가 되지 못한다.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흔히 환경도 지키고 복지도 강화하면서 성장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일단 성장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환경이나 복지는 뒤로 밀리기 마련이다. 이른바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이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도 마찬가지이다.²²⁾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만연은 개개인의 삶의 자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제 사람들은 매사에 효율성과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고, 이는 결국 안정된 삶을 위협하게 된다. 한 사례연구 조사결과에서 한국적 재난의 공통된 특징으로 첫 손에 꼽은 것도 바로 이러한 측면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재난사고 관련자들은 대부분 이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태도가 보편화되어 있고, 안전에 대해서 매우 둔감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는 고비용이 수반되는 반면, 위험을 무릅쓰면 단기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²³⁾ 바로 위의 절에서 살펴본 ‘선 성장, 후 안전’을 당연시했던 단순 근대사회의 전형적 모습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감수 문화(risk taking culture)’는 (피할 수 있는) 재난을 낳는 요인이 된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경우, 화물의 초과 적재 및 평형수 부족, 일기가 불순한 상황에서의 무리한 운항, 비용 절감을 위한 항로 조정 등 위험을 무릅쓴 정황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만일 이러한 위험 감수를 전제로 압축 성

22) 하승수·서형원, 『幸福하려면, 녹색』(이매진, 2014), pp. 27-31 참조.

23) 함인희, “‘세월호 침몰 사고’에 투영된 한국사회 자화상”, 『4. 16(세월호 사건)에 대한 인문적 성찰과 재난인문학』, pp. 140-141.

장에 길들여져 온 우리의 의식과 관행,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정부의 성장제일주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위험 관리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²⁴⁾

3.2 신자유주의의 확산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겪으며 한계를 드러내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지지했던 케인스(J. M. Keynes)의 수정주의 노선을 재비판하면서 등장한 현대의 자유주의를 일컫는다. 말하자면 정부가 자본의 흐름에 개입하여 경제활동을 간섭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의식에서 다시 제약 없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론이다.

신자유주의가 국제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79년 영국에서 집권한 대처(M. Thatcher) 수상이 매우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여 ‘대처리즘(Thatcherism)’을 탄생시키고, 1980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레이건(R. Reagan)이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여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를 탄생시키면서부터였다. 이들은 각종 규제를 풀어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주고 자본가의 판단에 따라 쉽게 구조조정을 하도록 허용하는 등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경기를 크게 활성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는 신자유주의가 매우 유효하다는 심증으로 이어졌다. 특히 ‘규제 완화’, ‘세금 축소’,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복지정책 축소’ 등의 조치들은 많은 자본가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²⁵⁾

신자유주의가 사회적 문제를 보는 기본 시각은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통한 성장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이다.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즉,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면, 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문제도 해결되며 임금수준도 상승하고 결국은 빈곤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전제하는 자유경쟁과 적자생존을 통한 능률 향상이라는 논리는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자유’ 경쟁이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조건이 현저히 다름에도 ‘자유롭게’ 경쟁하라는 것은 마치 한 쪽은 중무장을 하고 다른 쪽은 맨손으로 싸우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개인과 국가의 편차나 특수한 조건을 무시하며 인권·

24) 함인희, 위의 책, p. 148 참조.

25) 주경복, “신자유주의를 말한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갈라파고스, 2007), pp. 190-191.

생존권·주권조차 무시하는 개념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인간적 자유, 사회적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또 신자유주의로 인한 지나친 경쟁주의가 약육강식의 냉혹한 질서를 낳고 그 속에서 다수의 약자들이 소외되고 만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이런 이유로 신자유주의는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강자와 ‘있는 자’들을 위한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오늘날 비정규직 일자리의 폭증, 하청과 재하청을 거듭하는 관행,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이른바 ‘갑질’ 횡포 등도 바로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그늘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신자유주의화가 더 문제시되는 것은, 복지국가 시대를 수십 년간 겪은 뒤 신자유주의 시대로 접어든 서구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개발독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본적 사회안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신자유주의를 급격히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학자는 이를 ‘악성 신자유주의’라 부르기도 한다.²⁶⁾

특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논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노후선박의 선령이 연장된 점, 선장을 비롯한 선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었다는 점, 국가의 해양사고 구조업무가 부분적으로 민영화되었다는 점 등에 주목한다. 요컨대 정부가 공공성을 저버렸다는 것이다. 다음 글은 이러한 점을 신랄하게 지적한다.

신자유주의가 지속되는 한 세월호는 지속된다. 세월호가 평형수를 빼내듯, 신자유주의는 사회공공성을 갉아먹는 탓이다.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핵심 공통영역의 갈취, 그 결과는 사람들의 폐죽음이다. 평형수가 배의 복원력 회복에 필수적이라면, 공공성은 생명안보에 절실하다. 자본은 게걸스럽게 이를 사유화하고, 국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그 해체를 조장한다. 그래서 ‘국민’의 몰살이 초래되는 바, 세월호는 이런 점에서 불량한 자본국가의 비극적 연장선에 있다. 세월호는 (...) 신자유주의 자본국가의 구멍 난 공공성을 상징한다.²⁷⁾

신자유주의의 확산이 비정규직을 증가시키고 아웃소싱(outsourcing)을 확대시킴으로써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지닌 사람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최근에 재난이 더욱 빈발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세월호의 선장이 비정규직이었던 것처럼, 해당 분야에 경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 현장 책임자가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평생을 한 직종에서 살았던 경험이나 한 기업에서 뼈를 묻고 싶다고 할 정도로 충성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한 파견

26) 조한혜정, “애도, 그 사회적 카타르시스의 시간을 위하여”, 『4. 16(세월호 사건)에 대한 인문적 성찰과 재난인문학』, p. 8, 주) 17 참조.

27) 전규찬, “영원한 재난상태: 세월호 이후의 시간은 없다”, 『눈먼 자들의 국가』(문학동네, 2014), p. 163.

직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²⁸⁾

3.3 ‘위험사회론’의 적용을 통한 성찰

세월호 사건 이후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론’이 다시 주목 받은 바 있다. 벡에 따르면,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근대화를 통해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 이렇게 부가 확대 재생산되는 동안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부를 얻기 위해 감수해야 할 필요악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선성장, 후 안전’을 당연시했는데, 이 시기를 ‘단순 근대’라 부른다. 이러한 단순 근대 사회에서 성장을 위해 위험을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위험의 영향이 그다지 파괴적이지 않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문명이 더 발전하고 물질적 풍요가 더 증대되자 이제는 ‘감수할 수 없는’ 위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후변화나 원전폭발 같은 것이 대표적 예이다. 이런 파국적인 위험의 등장은 부의 생산과 충돌을 일으킨다. 위험사회란 이런 위험을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기술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물질적인 풍요도 늘어나지만, 우리 삶은 점점 불안하고 위태로워진다. 이런 사회에서 등장하는 위험은 예측할 수도 예방할 수도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회가 아무리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고도 위험기술이 가진 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벡은 단순 근대화를 계속해서 위험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찰적 근대화’를 제시한다. 성찰적 근대화란 제도가 위험을 생산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으로 그는 ‘성찰적 과학발전’과 ‘하위 정치’를 제안한다. 성찰적 과학발전이란 그동안 과학자들에게만 맡겨졌던 일부 중요한 사회적 결정에 일반인도 참여하는 것으로 대표되고, 하위 정치란 정치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된 일반인들이 정치를 의회에만 맡겨 두지 않고 직접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벡의 위험사회론을 한국 사회에 적용한 대표적인 예가 ‘이중 위험사회론’이다. 한국은 고도 산업화로 인한 ‘위험사회의 위험’과 합리성의 부족으로 인한 ‘위험사회 이전의 위험’을 동시에 지닌 사회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는 했으나 아직 근대화가 제대로 성취되지 못한 탓에 정치의 민주화와 사회의 합리화가 정착되지 못함으로써 이중적 위험을 떠안고 있는 사회라는

28) 우석훈, 『내릴 수 없는 배』 (웅진지식하우스, 2014), pp. 81-84 참조.

것이다.²⁹⁾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다. 백의 책 『위험사회』(1986)는 독일 사회를 대상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거기에 따르면 핵발전소의 유무가 한 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하는 척도가 된다. 이는 한편으로 핵의 파국적 위험성을 전제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독일과 한국은 같은 위험사회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독일과 한국은 결코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부패와 비리의 정도 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2013 세계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독일은 78점으로 12위이지만 한국은 55점으로 46위이다. 독일에 비해 한국은 부패가 심한 비리사회인 것이다. 양국이 모두 핵발전소를 보유한 고위험 과학기술 국가이긴 해도, 독일이 비리가 적은 ‘일반 위험국가’라면 한국은 비리가 많은 ‘악성 위험국가’인 것이다. 악성 위험사회에서는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가 있어도 비리 때문에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사고가 빈발한다. 이처럼 비리에 의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가 빈발하는 사회를 홍성태는 ‘비리-사고사회’라 부르면서, 한국사회를 그 대표적인 예로 꼽는다.³⁰⁾

그에 따르면, 비리-사고사회는 비리 세력이 오랫동안 지배한 잘못된 정치의 역사적·구조적 산물이다. 한국은 심지어 고도의 위험시설인 핵발전소마저 온갖 남품 비리와 운영 비리로 얼룩진 매우 심각한 비리사회이다. 개인이나 기업은 탐욕에 사로잡혀 비리를 추구할 수 있어도, 이것을 제어해서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이다. 그러나 정부가 무능하거나 부패하면 이러한 비리 세력을 제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정부를 장악하여 비리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매수와 세뇌로 다수의 국민을 포섭하여 권력을 전횡하게 된다.³¹⁾

위의 분석처럼 이러한 상황이 바로 세월호 참사를 낳은 근본 원인이라면, 일단 우리 사회의 단기적 전망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과거형 재난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형 위험까지 이미 도래해 있는 이중 위험사회인 데다가, 사회체제는 비리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현재 우리가 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를 깨닫게 된다. 이러한 과제는 사고에 대한 단순한 기술적·제도적 대응을 넘어 비리를 가능케 하는 구조와 문화를 바꿔야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형식적 민주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백이 제시한 ‘참여민주주의’와 같은 실질적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29) 김대환, “돌진적 성장이 낳은 이중 위험사회”, 『계간 사상』(1998 가을), pp. 26-45 참조.

30) 홍성태, “세월호 대참사와 비리-사고사회 한국”, 『4. 16(세월호 사건)에 대한 인문적 성찰과 재난인문학』(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문명연구사업단 심포지엄 자료집, 2014. 10. 31), pp. 131-133.

31) 홍성태, 위의 글, p. 134.

4. 대안의 모색: ‘성장 대 안전’이라는 대립 구도의 타파-독일의 경우

끝으로 우리가 당면한 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대안으로서, 다시 말해 ‘성장과 안전’이라는 대립 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경제 사회모델로서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경제성장과 안전이 과연 대립되는 개념인지에 대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생각할 때, 안전을 위해 돈을 쓰면 성장에 투자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니까 안전과 성장은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또 위의 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대화로 인해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된 위험사회에서는 물질적 욕구는 줄어드는 반면 위험에 대한 감수성은 커져서 사람들이 점차 성장보다 안전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즉, 사람들의 가치관이 점차 성장을 중시하는 쪽에서 안전을 중시하는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더욱이 성장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치명적 위험을 경험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성장을 위한 투자를 좀 줄이더라도 안전을 위한 투자를 늘리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현재 서구 선진국들이 걷고 있는 길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기도 하다.

그런데 안전과 경제가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 즉 이 둘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윈-윈하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라가 있다. 바로 독일이다. 잘 알다시피 독일은 2014년 7월에 2022년까지 자국 내의 모든 핵발전소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던 위원회의 명칭은 특이하게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원자력‘윤리’위원회였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토퍼(Klaus Töpfer)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원자력의 문제를 효율성이라는 틀로 판단해도 되는지를 가장 먼저 결정해야 했다. 원자력 기술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라든지, 다음 세대에게 원전 폐기물의 위험을 넘겨주게 되는 세대 간 정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효율성의 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였다.³²⁾

32) 장덕진 외, 위의 책, p. 243에서 재인용. 독일이 원전폐쇄를 선언하기까지는 17인으로 구성된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적 역할이 있었다. 이 17인 위원회에는 뜻밖에도 다양한 인사가 참여했는데, 원자력발전 전문가나 과학자가 아닌 종교지도자, 철학자, 교수, 정당, 경제인, 시민단체 대표 등이 그들이다. 독일은 원전을 반핵, 찬핵,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 위원회의 바흐만 사무총장은 2011년 7월 초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의 교훈은 원전 폭발 사고, 노심용해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이런 사회는 지속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벗어나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보해 탈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독일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17인 위원회가 의사 결정을 하는

이처럼 다음 세대의 안전과 행복까지 고려할 정도의 거시적 수준의 논의라면, 이는 이제껏 근시안적 성장에만 매달려온 우리 사회와는 차원이 다른 논의일 수밖에 없다. 참으로 부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독일에 주목하는 이유가 단지 그 이상주의적이고 윤리적인 담론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원자력보다 신재생에너지가 더 싸다. 이는 일찍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을 기울인 결과로서, 현재 이 분야의 고용 인원만도 수십 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독일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안전과 경제가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퇴피 교수에 따르면, 독일의 원전 폐쇄와 에너지 전환의 효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원자력은 그 특성상 소수의 거대 기업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도 얼마든지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약 800개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사회가 이미 탈원자력 시대의 경제사회 모델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만일 우리가 독일처럼 에너지 전환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래서 사회적 갈등 비용 없이 고용도 늘리면서 경제사회 모델의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창조경제’가 아니겠는가?³³⁾

5. 맺음말

세월호의 위기는 정권의 위기도 아니고, 희생자와 그 가족들만의 위기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공공성의 위기이고, 따라서 우리 모두의 위기다. 세월호라는 비극이 벌어지기까지 수많은 연결 고리들이 있었다. 그 중 한두 가지만 제대로 작동했다더라도 이 비극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익 극대화를 위해 안전에 무관심한 청해진해운의 비정상적 경영이 없었다면, 해운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퇴직 후 많이 옮겨간다고 알려진 한국선급의 봐주기가 없었다면, 46척 가운데 2척밖에 작동되지 않았던 구명정만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구명정 검사 업체의 부실 점검만 없었다면, 평소 해경이 선박 진입 훈련을 한 번이라도 해보았다면, 우리 사회에 수학여행을 연안여객선 적자 보전 수단으로 보는 물질만능주의가 없었다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졌다면, 그들을 직업윤리 따위는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든 하나의

데에는 공개토론토도 큰 역할을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위원회는 사흘간의 집중토론과 11시간의 TV 생방송을 통한 공개토론을 개최했으며, 이 토론에는 30명의 외부 전문가도 참가했다. 그는 “곧 세계가 바뀔 것이다”라며 “과거처럼 하면 경쟁력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에너지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원전 폐기는 기술 아닌 윤리 문제”, <경향신문>, 2011. 7. 12)

33) 장덕진 외, 위의 책, p. 244.

원인이었을 비정규직 고용과 저임금 문제가 없었다면... 이 수많은 연결 고리 중 한두 가지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³⁴⁾

위의 인용문에서 느낄 수 있듯이 세월호 사건은 우리에게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원인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뿌리 깊은 지를 보여준다. 위와 같은 인재(人災)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 사회가 그대로 나아갈 경우 차후에 또 어떤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위험사회의 상징적 사고인 핵발전소 사고이다. ‘이중 위험사회’이자 ‘악성 위험사회’이며 ‘비리-사고사회’인 우리 사회가 핵발전소 사고를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한국은 후쿠시마의 비극을 겪고 있는 일본 사회보다 더욱 치명적인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 어쩌면 미래 세대에 대한 정의를 거론하기에 앞서 우리의 미래 세대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것이 세월호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자 우리의 대오각성(大悟覺醒)을 촉구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연 평균 8%대의 고도성장을 보이다가 2000년대부터 3~4%대의 저성장체제로 바뀌었다. 고성장시대에는 ‘위가 넘치면 아래로 흐르는’ 낙수효과가 있었고, 매사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빨리 빨리’ 문화도 사후의 풍성한 성과로 합리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저성장시대에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빨리 빨리’의 편익은 작은 반면, 그 대가는 크다. 따라서 이제는 ‘빨리 빨리’ 문화에서 벗어나 기대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 정부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 매달리는 근시안적 자세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는 저성장체제에 접어들어 서구 나라들과 같이 효율보다는 형평과 안전을 더 중시하는 열린사회가 되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각자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국가 개조를 내세우기에 앞서 권력의 상호 견제 장치를 정비함으로써 부정과 비리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에서 벗어나 기업주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경영을 해야 하고, 정도경영, 투명경영, 준법경영을 해야 한다.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에 자신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노사정 대타협에 동참해야 한다. 부유층은 세금과 기부 등 ‘체제유지비용’을 기꺼이 부담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한다.³⁵⁾

우리는 6.25 전쟁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반세기 남짓 오로지 경제성장에 매달려왔다. 그간 안전, 형평, 정의, 복지 등은 경제성장이라는 지상목표에 가려 후

34) 같은 책, p. 237.

35) 안국신, 위의 책, pp. 120-121.

순위로 밀렸다. 여기에 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하도록 하였고, 이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더욱 소홀히 하는 데 일조하였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목표와 방식이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는 임계치에 도달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제는 경제성장보다 삶의 질을, 효율성보다 안전을, ‘빨리빨리’보다 느리고 여유 있는 삶을, 결과적 성취보다 과정상의 정도(正道)를 더 중시하는 도덕사회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만일 한국 사회가 이러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한국이라는 배는 세월호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³⁶⁾

36) 본 논문은 2015. 4. 12. 투고되었고, 2015. 6. 29일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2015. 7. 14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 참고 문헌

-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금요일엔 돌아오렴-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창비, 2015).
- 강수돌, “세월호 사태와 기업·정부의 사회적 책임”, 『4. 16(세월호 사건)에 대한 인문적 성찰과 재난인문학』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문명연구사업단 심포지엄 자료집, 2014. 10. 31).
- 강준만, “짜가지 없는 진보”, 『인물과 사상』 (2014).
- 김대환, “돌진적 성장이 낳은 이중 위험사회”, 『계간 사상』 (1998 가을).
- 도홍찬, “고등학생들이 바라본 세월호 사건, 그리고 윤리교육의 반성”, 『세월호 사건에 대한 총체적 성찰』 (2015년 한국윤리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5. 6. 5)
- 안국신, “더불어 잘 사는 ‘바로 바로’ 사회”, 『철학과 현실』 102호(철학문화연구소, 2014 가을).
- 우석훈, 『내릴 수 없는 배』 (웅진지식하우스, 2014).
- 울리히 벡(홍성태 역),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새물결, 2006).
- 장덕진 외, 『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재난과 공공성의 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2015).
- 전규찬, “영원한 재난상태: 세월호 이후의 시간은 없다”, 김애란 외, 『눈먼 자들의 국가』 (문학동네, 2014).
- 조한혜정, “애도, 그 사회적 카타르시스의 시간을 위하여”, 『4. 16(세월호 사건)에 대한 인문적 성찰과 재난인문학』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문명연구사업단 심포지엄 자료집, 2014. 10. 31).
- 주경복, “신자유주의를 말한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갈라파고스, 2007).
- 하승수·서형원, 『幸福하려면, 녹색』 (이매진, 2014).
- 한영우, 『미래와 만나는 한국의 선비문화』 (세창출판사, 2014).
- 함인희, “‘세월호 침몰 사고’에 투영된 한국사회 자화상”, 『4. 16(세월호 사건)에 대한 인문적 성찰과 재난인문학』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문명연구사업단 심포지엄 자료집, 2014. 10. 31).
- 홍성태, “세월호 대참사와 비리-사고사회 한국”, 『4. 16(세월호 사건)에 대한 인문적 성찰과 재난인문학』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문명연구사업단 심포지엄 자료집, 2014. 10. 31).

<Abstract>

A Reflection upon the Crisis of Korean Society
- Seen from the Sinking of the Ferry “Sewol”

PARK, Chan Goo

All Koreans were shocked and exasperated by the catastrophe of the ferry “Sewol”. The ship was sunken with 304 passengers including 250 high school students on board last April. The victim was too large in number, and the crewmen and the National Maritime Police neglected their duties to save the passengers. Some serious problems of the modern Korean society could be found in this incident.

In this essay, problems from several points of view will be considered: problems seen from highschool students, the improper behavior of the crewmen and the National Maritime Police, and the unclear investigation process of the accident. Furthermore, some backgrounds of this incident will be considered: the supremacy of the economic development, neo-liberalism, corruption of the government, and a reflec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Risk Society.” The supremacy of the economic development made people value profit above security. The neo-liberalism increased irregular jobs and therefore weakened the sense of responsibility from labourers. The corruption of the government resulted in lack of supervision in political, social organizations. Korea may now be called ‘the corruption-accident society.’

If Korea wants to overcome this crisis and build a safe society, there should be a change in its structure and culture that have been formed during the high developing period. For this difficult task, the case of Germany will serve as a reference. Because Germany showed that “profit” could balance with “security.” If Korea cannot perform this task successfully, Korea cannot survive in the coming age.

【Keywords】 the crisis of Korean society, the sinking of the ferry “Sewol”, the supremacy of the economic development, neo-liberalism, “the corruption-accident society”